



의안번호	제 2025 - 9호
보 고 연 월 일	2025. 3. 24. (제13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67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2
1. 유형분류 검토	2
2. 형량범위 검토	2
3. 양형인자 검토	3
 I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5
1. 형량범위 검토	5
2. 양형인자 검토	5
 IV.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6
1. 유형분류 검토	6
2. 형량범위 및 형종선택의 기준 검토	6
3. 양형인자 검토	8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12
 V.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13
1. 설정범위 검토	13
2. 형량범위 검토	13
3. 양형인자 검토	14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19
 VI. 향후 일정	20

【별첨】

이혜랑,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장유강, 이성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관계기관 의견 검토”

이혜랑,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관계기관 의견, 공청회 결과 등 검토”

장유강, 이성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이혜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자문위원 회의, 관계기관 의견, 공청회 결과 등 검토”

장유강, 이성화,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이혜랑, “성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장유강, 이성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관계기관 의견검토”



I. 제167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4. 3. 11.(월) 15:00 ~ 18:00
- 장소: 대법원 4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량,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홍진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1. 유형분류 검토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별도 유형화 필요

- (1) 의견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중 보이스피싱범죄는 가담 유형별로 별도 유형화 필요(공청회 박소현 입법조사관 지정토론)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나.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별도 유형화 필요

- (1) 의견 요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공청회 박중욱 지정토론), ②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대한변협)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재검토 필요

- (1) 의견 요지: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을 피해자의 다수성 및 불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공청회 정유철 변호사 지정토론)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형량범위 검토

가. 사기죄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

- (1) 의견 요지: ① 일반 사기죄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공청회 정유철 변호사 지정토론), ② 일반 사기죄 및 조직적 사기죄의

3, 4유형의 가중영역의 상단을 높일 필요가 있음(공청회)

(2) 검토: 현행유지 ⇨ 견해 일치

3.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인자

(1)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1, 2 유형)

(가) 의견 요지: ①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협), ② 수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비난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큼. 피해자 책임이 제한된 사례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여성변협)

(나) 검토: 현행유지 ⇨ 견해 일치

(2) 실질적 피해 회복(1, 2 유형)

(가) 의견 요지: ① 경매 등 피해자의 노력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피고인의 이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감형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공청회), ② ‘재산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부분을 ‘재산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1/2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협)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3) 단순가담(2 유형)

(가) 의견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가담”도 필수불가결한 행위분담이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은 부당(공청회 박소현 입법조사관 지정토론)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나. 특별가중인자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의견 요지: ① 보험사기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의미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범위에 ‘자동차정비업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공청회, 금융감독원), ② 전문직 종사자 정의 규정 확대(여성변협)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다. 일반감경인자

(1) 상당한 피해회복

(가) 의견 요지: “상당한 피해회복” 정의규정 마련이 필요(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대한변협, 한국성폭력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Ⅲ.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1. 형량범위 검토

(1) 의견 요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반영으로 인한 형량 상승 등에 비추어 볼 때 2유형 기본영역 변경 필요(공청회 정유철 변호사 지정토론)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인자 중 ‘단순가담’

(1) 의견 요지: ‘단순 가담’의 양형인자를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는 현재의 양형기준안을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조직적 범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자는 의견)(한국여성변호사회/대한변협 의견)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IV. 동물보호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1. 유형분류 검토

가. 유형분류의 다양화 필요

- (1) 의견 요지: ① 온라인상의 동물학대, 동물대상 도박 문제 등 다양한 동물학대 행위의 현실을 반영한 유형 분류 필요(공청회 교수 박미량 지정토론), ②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재 범죄(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양형기준 수립 필요(공청회 변호인 서국화 지정토론, 동물권행동 카라), ③ 상습범, 방임유기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유형의 양형인자 별도 신설 필요(대한변협)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형량범위 및 형종선택의 기준 검토

가. 벌금형 하한 설정 및 전반적 형량 범위 상향 필요

- (1) 의견 요지: ①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위해 2유형 감경범위에 벌금형 하한 설정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동물권행동 카라, (사)동물자유연대], ② 1, 2유형 형량 범위 전반적으로 상향 필요[(사)동물자유연대, 공청회 변호사 서국화 지정토론], ③ 1유형 범행의 중대성,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1유형 형량 범위 상향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 ④ 1유형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1유형 가중 권고 형량범위에 있어 벌금형 삭제[공청회 국회입법조사관 김광현 지정토론], ⑤ (1안)상습범인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고 상습범에 대해 추가적으로 1/2까지 형을 가중, (2안)1, 2유형 가중영역 상한 상향 검토 (농림축산부)

(2) 검토

(가) 양형기준 설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 500만 원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4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나) 견해일치 부분

- 1, 2 유형의 각 영역의 징역형, 벌금형에 대하여 현행 유지

(다) 견해대립 부분: 소유형 1의 가중영역에 서술식 기준을 추가할지 여부

[서술식 기준]

- ▷ 1유형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안(8인, 다수의견):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안
 - 징역형 형량범위와 벌금형의 형량범위 부분은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
 - 다만, 1유형의 가중영역에서, 공청회에서 양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다른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점을 반영하여 1유형의 가중영역에 위와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2안(5인):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는 안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현행안을 수정해야하는 사정변경 없음

3.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가중인자

- (1) 의견 요지: ①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인 경우/범행 장면, 피해동물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온라인에 게시·배포한 경우/사체 손괴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농림축산식품부, (사)동물자유연대], ② 공공 서비스 또는 보조건으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범죄/잔혹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 사용/통신매체를 통해 범죄의 세부 사항·사진·비디오 등을 유포한 경우/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가한 경우 추가(한국여성변호사회), ③ 동물살해 후 시체 해부, 능욕하는 과정까지 촬영, 게시한 경우 추가(공청회 교수 박미랑 지정토론)
-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나. 특별감경인자

(1)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가) 의견 요지: ① 소유자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공청회 교수 박미랑, 국회입법조사관 김광현 지정토론], ② 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의 개념 추가 실시 필요(대한변호사협회), ③ 타인 소유 외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 규정에 ‘피해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포함/동물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재산권보다는 생명존중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변경(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 ➡ 견해 대립

○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 규정의 수정여부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기존의 재산범죄로만 다뤄오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동물의 생명이 주된 보호법익이 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의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은-특히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부분- 동물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어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는 수정이 필요함

○ 1안(5인): 정의규정에 다음과 같은 서술을 추가하는 안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같다.

- 동물보호법이 주로 동물의 생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으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재산도 일부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어야 함
- 상대방이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 대한 치료비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감경인자로 보는 이상, 내가 기르는 동물이 다친 것을 내가 다시 치료를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경인자로 볼 필요가 있음
- 원안의 경우 “다만,” 이하의 공탁 관련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직접 치료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안(3인):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안

[실질적 피해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1안과 유사한 취지로, 동물보호법이 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면서도 소유자의 재산도 일부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됨
- 이를 전제로 정의규정을 수정할 때, 별도의 서술을 추가할 필요 없이, 현행 정의규정에서 “합의에 준할 정도로”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예시로 든다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 대한 치료비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및 내가 기르는 동물이 다친 것을 내가 다시 치료를 해준 경우도 정의규정에 포섭할 수 있음

- 3안(5인): 원안을 유지하는 안

- 현재 정의규정으로도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므로 굳이 수정의 필요성은 없음

- 공동 다수의견인 1안과 3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 1안(7인, 다수의견): 정의규정에 다음과 같은 서술을 추가하는 안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같다.**

- 3안(6인): 원안을 유지하는 안

(2)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가) 의견 요지: 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객관

적으로 확인할 기준이나 방법이 모호하므로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삭제 필요, ② 육체적·정신적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법원 소속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건 사항 수집, 조사, 제출로 객관적 입증 과정 선행 필요(동물권행동 카라)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다. 일반가중인자

(가) 의견 요지: ① 일반가중인자에 ‘유실·유기동물, 학대 받은 적이 있는 동물, 피고인 소유의 반려 동물,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추가(농림축산식품부), ② 일반가중인자에 ‘집단 범행, 동일기획 수회 학대, 범죄에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추가(동물자유연대), ③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아닌 ‘범죄의 반복성, 피해 동물의 수’가 주된 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설정(공청회 변호사 서국화 지정토론)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라. 일반감경인자

(1) 진지한 반성

(가) 의견 요지: ‘진지한 반성’이 감경인자로 적용되려면 법원

소속 조사관을 통한 양형조건 사항의 철저한 수집, 조사, 제출로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 과정 선행 필요(동물권행동 카라)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가) 의견 요지: 처벌 이후 해당 피해 동물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요소로 고려(공청회 교수 박미량 지정토론, 한국여성변호사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V.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 검토

1. 설정범위 검토

(1) 의견 요지: 성착취목적대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공청회 선미화 경정 지정토론)

(2)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형량범위 검토

(1) 의견 요지: 피보호·피감독자 간음(19세 이상) 양형기준의 상향이 필요(공청회 김혜정 소장, 박현주 변호사 지정토론,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검토 ⇨ 견해 대립

○ 1안(8인, 다수의견): 원안을 유지하는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 전문위원 회의 당시 3유형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안이 2안으로 검토되었으나,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현행 수정안으로 의결됨

- 의제추행(중유형 다. 소유형 3, 법정형 10년 이하)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 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중유형 다. 소유형 2, 법정형 7년 이하)은 피해자가 궁박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함
- 1유형인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3유형인 의제추행의 법정형

의 차이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함

■ 10월에서 2년까지 분포되어 있는 양형실무를 모두 포섭할 수 있음

■ 2안은 3유형 의제추행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데, 2유형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10년 이하가 아닌 7년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3유형과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함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함

- 양형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추후 수정함이 타당함

○ 2안(5인):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과 3년으로 상향하는 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2년6월 3년
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 같은 법정형 7년 이하 유사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보다 양형기준이 낮으나, 간음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유사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행위태양이 유사한 '의제간음'과 비교하여 이보다 낮게 설정하면 되고,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행위태양이 추행인 '의제추행'보다 낮은 것은 불합리함. 다만 가중영역의 하한만 1년으로 하여 '의제추행' 양형기준과의 차이를 둘 수 있음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인자

(1)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나. 유형)

(가) 의견 요지: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청각 및 언어 장애인(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한국여성변호사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3) 처벌불원(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삭제 또는 이를 일반양형인자로 변경/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일반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포섭되도록 정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나. 특별가중인자

(1)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다른 표현으로 규정 수정(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 유형)

(가) 의견 요지: “피고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경제적, 스토킹등

의 정서적 폭력 피해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도 포함되도록 정의 규정 수정(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3) 윤간(다. 유형)

(가) 의견 요지: 표현 수정(공청회 김혜정 소장, 박현주 변호사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 집단강간의 구체적인 행위양태를 한자로 표현한 단어로, 성범죄 행위를 묘사하는 폭력을 선정적으로 뒤바꾸는 표현물에서 사용됨
- “2인 이상 범행 가담”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

(나) 검토 ➡ 견해 대립

- 1안(8인, 다수의견): 원안을 유지하는 안
 - 가령 수인이 모두 각각 간음행위를 하였어야 하는지, 유사간음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등 ‘윤간’이라는 표현의 정의 자체에 대하여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기회가 없었음
 - 현재 ‘윤간’ 양형인자는 대유형 1의 유사강간을 포섭하고 있는 중유형 가.의 ‘1. 일반강간’, ‘2. 청소년강간’, 중유형 다.의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3. 유사강간’, 중유형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4. 유사강간’에 적용되지 않음. 또한 중유형 마.의 균형법상 성범죄에는 ‘윤간’ 양형인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시부터 ‘윤간’은 판결 분석을 토대로 한 경험적 근거로 객관적 인자 중 범행 수단의 가중인자로 고려되었고, 당시 ‘2인 이상 윤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정의가 논의된 자료는 없음. ‘윤간’은 현재와

같은 형태(대유형 1의 중유형 가.에서 1. 일반강간에서 제외. 이후 2. 청소년강간이 추가되었으나, 윤간은 적용하지 않는 등)로 양형인자로 설정되었고, 범죄유형을 추가하거나, 형량범위를 가중하는 수정이 있어왔으나, ‘윤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자료는 찾지 못하였음. 특정 범죄유형에서 ‘윤간’을 적용하다가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는 수정도 없었음

- 윤간이라는 표현은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시부터 사용되어 왔고,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가 축적되지 않음
- 윤간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추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시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 2안(4인): “동일 기회에 2인 이상이 직접 간음한 경우”로 변경하는 안
- 3안(1인): “2인 이상이 직접 간음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로 변경하는 안

(4) ‘동종’ 전과(나. 다. 유형, 일반가중인자에서도 동일)

(가) 의견 요지: 동종 전과에 “약취·유인범죄, 성매매 범죄”도 포함될 필요(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다. 일반감경인자

(1) 상당한 피해회복

(가) 의견 요지: “상당한 피해회복” 정의규정 마련이 필요(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대한변협, 한국성폭력상

답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라. 일반가중인자

(1)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다. 유형)

(가) 의견 요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수정(공청회 선미화 경정 지정토론)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2) 2차 피해 야기(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2차 피해 야기”의 정의 규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구절 삭제(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3) 비난 동기(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정의 규정에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 추가(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4) 인적 신뢰관계 이용(나. 다. 유형)

(가) 의견 요지: 정의 규정에 “부부, 애인, 데이트 상대자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 포함 필요(한국여성의 전화)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4. 집행유예 검토

가.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및 분명

(가) 의견 요지: 일반참작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및
분명” 삭제(공청회 김혜정 소장 지정토론, 한국성폭력
상담소)

(나) 검토: 현행 유지 ⇨ 견해 일치

VI. 향후 일정

- 일시: 2025. 5. 26.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
- 안건: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